

1. 충남 산업경제의 미래 정책방향

공간계획연구부 백운성 책임연구원

1.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

1) 글로벌 트렌드 변화

■ 세계경제의 블록화 진행과 동아시아의 경제통합

- 현재의 세계경제는 북미(NAFTA), 유럽(EU), ASEAN+3 등으로 세계경제 및 정치의 블록화가 강화되고 있으며, 거대경제 블록화 구조가 정착될 전망
- 이러한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는 지역적 이점이 큰 국가들이 함께 뭉쳐 타 블록이나 개별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 뒤, 다시 블록(경제권)내에서 2차적 경쟁을 하는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이뤄지는 새로운 경쟁의 양상
- 우리나라는 ASEAN+3를 중심으로 역내 FTA체결확대에 따른 교역 및 투자확대와 금융 및 통화부문에서의 협력강화 등의 경제협력이 중요한 시점

■ 동아시아의 성장과 환황해경제권의 부각

- 세계경제에서 동북아의 영향증대로 환황해경제권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세계경제 중심축의 이동이 가속화될 전망
- 동북아 지역은 경제규모면에서 NAFTA, EU에 이은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고, 한·중·일 3국간의 교역 및 투자는 급증하는 등 역내 경제의존도 증대
- 국내적으로도 그동안 우리나라 대외적 중심거점의 역할이 남동해안에서 중국·인도 등의 아시아진출에 유리한 서해안으로 경제권 이동이 진행중

■ 녹색성장시대로의 이행

-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‘환경’ 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‘자원’ 위기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음
- 세계 각국은 저탄소화 및 녹색산업화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(Green Growth)개념에 주목
 - Greenomics(Green+Economics)의 부각; 환경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 경제성장을 추구
- 충청권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석유화학단지, 화력발전소, 철강산업단지 등이 집적화되어 있는 지역이며, 앞으로의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저탄소화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

2) 국내 경제여건 변화

■ 저성장시대로의 진입과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달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

-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1980년대의 7.5%, 1990년대의 6.2%에서 5% 내외로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, 오는 2012~2025년의 한국 경제의 평균 잠재성장률은 2.4%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(OECD보고서)
 - 낮은 경제성장률은 경제성숙에 따른 자연적인 부분일 수도 있으나, 이와 함께 고용창출력이 낮은 첨단산업으로의 이행은 '저성장-저고용'의 문제를 초래
- 충남은 지역경제의 고도성장과정에 있어 제조업의 비약적인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지역산업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
 - 2000년~2008년 제조업비중변화(부가가치기준) : 충남 34.0%→49.8%, 전국 25.9%→28.8%
- 그러나, 제조업이 과거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·자본집약형 산업으로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임금상승 및 설비자동화 등으로 노동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
- 제조중심의 산업구조의 영향으로 충남의 고용없는 성장 정도는 여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(취업계수:전국평균 23.9명 vs. 충남 17.9명).
 - 2000년대 초반에는 경제가 1% 성장할 때 취업자가 10만명 정도 증가했지만 현재는 5만~6만명대에 불과한 것을 볼 때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

■ 베이비붐 시대의 은퇴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

-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의하면 2016년 노인인구(659만명)가 유소년인구(654만명)를 추월하여 2018년에는 고령사회(14%),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(20%)에 진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
 - 고령화진입(2000년, 7%), 노인인구 500만명 돌파(2008년), 고령사회진입(2018년, 14%), 초고령사회 진입(2026년, 20%)
-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국 중 가장 높으며, 반면 출산율은 2009년 기준 1.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저출산·고령화의 문제는 향후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다
- 충남지역은 2005년에 이미 노령인구 비중이 14.3%로 '고령사회(aged society)'로 진입하였으며, 2030년 경에는 노령인구 비중이 24.3%로 '초고령 사회(super-aged society)'로 진입할 전망이다
- 이와 함께 저출산·고령화의 문제는 국가 재정정책의 변화와 새로운 복지정책을 요구케 되었으며, 국가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침

2. 최근의 지역산업정책 동향과 충남의 당면과제

1) 최근의 지역 산업정책 동향

■ 공간중심의 3차원적 지역개발정책의 도입

- 경제의 세계화 및 지역화의 전개로 경쟁의 단위가 국가에서 지역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
- 지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광역경제권과 서해안 및 내륙첨단산업벨트 추진은 충청권 지역발전에 커다란 계기
- 충남은 광역권(대전,충남,충북)에 있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IT기반산업의 세계적 혁신거점을 조성할 가능성과, 서해안발전계획(초광역계획)의 추진으로 세계진출의 교두보 조성에 기회를 맞음
- 반면, 권역내 시·도들간의 유사산업들간의 경쟁구조의 격화 문제와 이로 인한 권역내 연계협력 등의 상호협력체계의 구축이 난제로 부상

■ 과학기술의 융복합화와 감성형시대에 대응한 신성장동력 육성

- 최근 IT, BT, NT기술간 융합의 급속한 발전으로 각 기술과 영역간의 경계를 넘는 기술혁신이 가속화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기술 및 서비스가 출현
- 기존 동종, 이업종간의 융복합화를 넘어 인간과의 융복합화에 대응하는 감성형 기술 개발이 산업혁신의 중심으로 대두
-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신성장동력, NBIC 국가융합기술지도 등 국가적 차원의 융합기술·산업육성을 추진하고 있음

■ 수도권 규제완화

- 최근의 경제위기 등을 거치며,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투자 활성화,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 등을 이유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음
- 수도권 규제완화는 일부 기업집단의 이익과 경제 활성화라는 일시적 정책목표의 달성할 수 있지만, 장기적으로 국가적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되며 이로 인해 경제의 잠재성장률까지 약화시킬 수 있음
- 충남은 수도권의 인접지역으로 수도권 기업의 도내 이전이 증가한데는 수도권 규제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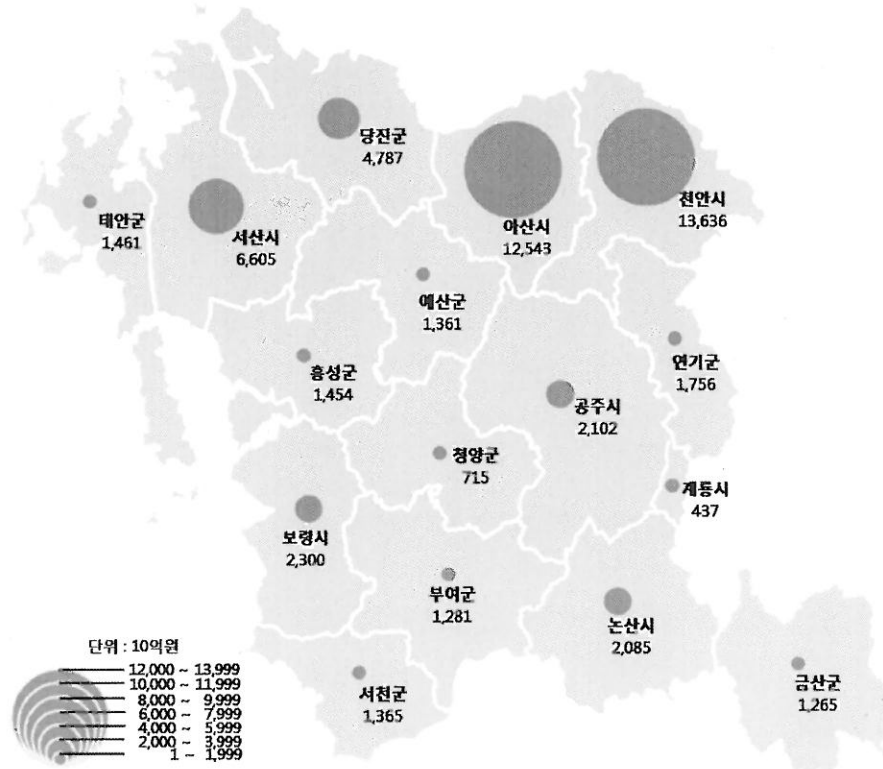
- 2000~2005년 기간 동안 수도권 소재기업 중 총 844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였고, 이 중 14%에 해당하는 126개 기업이 충남으로 이전함
-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는 충남의 수도권 기업유치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

2) 충남 산업경제의 최근 동향과 당면과제

■ 전국최고의 경제성장률 시현, 그러나 시군간 경제력 격차 증대

- 2000년 이후 충남은 지역발전과 고용창출,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와 외자유치를 주요전략으로 채택
- 이로 인해 충남은 2000년 이후 GRDP 성장률 9.0%로 전국최고의 경제성장률과 외투기업 유치 등의 발전을 이룸
- 그러나 이러한 발전이면에는 수도권 인접지역인 북부권 중심으로 산업활동이 집중되어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
- 북부권(천안, 아산, 서산 당진)지역이 GRDP(2007년)의 68.1%를 차지, 그 외 12개 시군이 31.9%를 차지

[그림] 2007년 시군별 지역내총생산 규모, 구성비, 생산구조¹⁾



1) 2007년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추계결과, 충청남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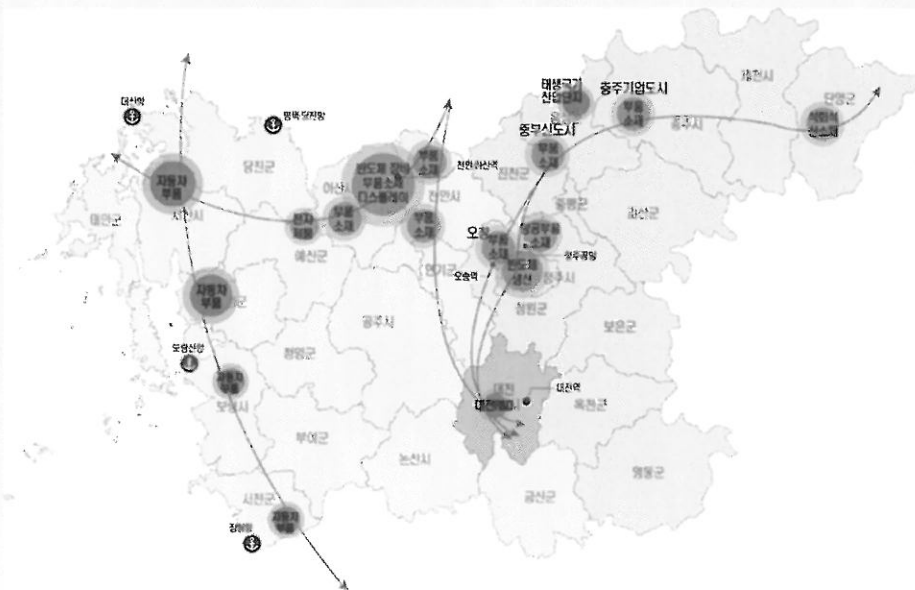
■ 지역산업육성정책의 재편에 따른 대응과 신성장 동력의 발굴 육성

- 2단계 4+9진흥계획이 2012년까지 마무리되고, 그동안 4대전략산업을 지원했던 균형발전특별회계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
- 산업정책도 기존의 개별 기업이나 부문 중심의 정책에서 광역적 협력을 요구하는 산업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며, 이에 따라 네트워크경제 확보를 위한 지역산업군집(거점 지역, 기능·특화 지역)의 형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
- 따라서, 지역산업정책의 공간구조 재편에 따른 광역권 협력 유도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상과 IT기반의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육성이 필요
- 이와 함께 충남차원에서는 현재까지 육성하였던 지역 4대 전략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정책 방안 모색이 필요

■ 충남을 포함하는 충청권은 수도권과 인접한 북부권과 경부고속도로 및 서해안 고속도로 등 도로망을 따라 점차 서해안 및 내륙으로 확대되는 경로의존적인 산업발전형태를 보이고 있음

■ 따라서 향후의 산업정책에 있어서도 충청권 상호 공조를 통한 IT기반 신성장동력 창출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며, 이를 기반 BT산업 등으로의 영역확대가 필요

[그림] IT 융·복합산업 집적지 및 확산경로²⁾



2)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(충청권)

■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저탄소화, 녹색성장을 위한 준비

- 기후변화, 녹색성장 등의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지난 1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
 - 기본법에는 녹색 경제산업 육성지원, 환경 친화적 세제 운영, 녹색산업투자 회사 설립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, 국제 배출권 거래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기업과 공공기관에 배출허용량을 제한하고, 배출 허용량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추진
- 충남은 화력발전, 철강, 석유화학 등의 산업집적으로 인해 전국 최상위 수준의 CO₂ 배출지역(1인당 배출량 15.21탄소톤, 전국평균의 4.6배)임
- 따라서 기존 탄소배출산업에 대한 저탄소화 지원정책의 입안과 추진, 배출권거래, 녹색산업의 발굴 등에 대응한 전략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

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성장관리

- 그동안 충남 지역경제의 고도성장은 제조업의 비약적인 성장에 기인하여 한 것으로 부가가치기준으로 제조업이 전체산업의 49.8%로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
- 중앙정부의 산업입지정책이 계획입지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, 충남은 산업의 급성장과정에 있어 개별입지의 급속한 증가로 지역의 난개발 문제를 초래
 - 1995년 500개미만이던 충청남도 개별입지 공장수는 불과 4년만인 1999년 1천개이상으로 증가, 또 4년만인 2003년 2천개를 초과하였으며, 2008년에는 4천개를 넘어섬
 - 개별입지 공장수 4,308개, 용지면적 4,454.9만m², 건축면적 1,899.5만m²(2008년 6월 기준)
- 개별입지의 문제는 환경오염문제, 주거환경 및 도시정비기반 악화, 지가에 대한 부작용,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사회적 비형평성 등의 문제를 초래
- 따라서 지역의 난개발방지 및 환경개선,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의 지역산업메니저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준산업단지, 공장입지 유도지구 제도 등에 대한 계획적 대응방안 검토가 필요

■ 지역의 경제산업정책에 발맞춘 새로운 일자리 창출

- 고용창출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어, 기업유치 및 산업육성 등의 투자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며, 고용창출의 중심은 제조업에 기반을 둔 생산자서비스업 지향의 일자리 창출 필요
 - 단순 서비스업 지향의 일자리 창출이 아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복합 고용전략의 모색
- 이와 함께 공익적 목적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지역정착이 중요한 과제

3. 충남 산업경제정책의 방향 정립

1) 산업경제정책 기조의 방향설정

■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관리에 중점을 둔 성장관리 정책으로의 전환 요구

- 시·군의 경제력 격차를 완화시키고, 도내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제조업 중심의 성장 이외 시군별 특화(전문)화된 산업정책의 방향 요구
- 다각화된 기업지원에 대한 서비스수요에 대해 “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시스템 구축·운영”을 통해 기업의 유치·지원·관리 등의 통합적 관리
 - RASS(Real service, After care, Single gateway, Single window)시스템 도입³⁾
- 신규 산단조성보다는 기존산업단지의 시설현대화 및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을 통한 활용도 제고
 - 지역의 난개발방지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해 점진적으로 개별입지 공장에 대한 준산업단지, 공장입지 유도지구 제도 등에 대한 계획적 대응
 - 도내 각 권역의 경제 및 산업 활동 특성과 여건에 부합되는 특화 산업단지 조성 및 낙후산업집적지의 현대화 추진
 - 산업화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과 폐수를 적절히 처리하고,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
- 지역민 및 지역기업들에 대한 경제정책정보 및 생활경제 정보제공을 통한 도정의 지속성 확보 및 경제교육을 통한 미래형 마인드 제고

■ 산업의 고도화 및 신성장 동력 육성

- 기존산업과의 연관이 높은 분야에서부터 출발하여 지역산업 여건 및 가용자원 규모를 고려한 IT기반의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
 - 전략산업과 녹색기술의 융합을 통한 산업의 녹색화 추진 및 녹색산업 육성
 - 전략산업 및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연계 IT기반의 융·복합산업 육성
 - 자동차 및 자동차산업 연계를 통한 Green Car 클러스터 조성
-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네트워크형 광역클러스터화 추진
 - 4대 전략산업별 집적지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기관·기업지원기관의 유치와 동종·유사업종 중심으로 산업집적화 추진 및 네트워크형 연계체계 구축
 - 생산단지와 교육, 문화 및 복지시설 등이 종합된 복합 클러스터로 육성
 - 산·학·연·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연구개발, 지식의 창출 및 공유

3) 첨부 참조

○ 산업의 구도화 및 재구조화

- 쇠퇴산업 및 탄소·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의 저탄소화 및 퇴출 유도 및 지원

■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에의 적극적인 대응

- 기후변화협약 등을 통한 녹색성장은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산업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중요한 요소지만, 실제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은 미흡
 - 정부의 녹색산업 육성계획 및 충남의 R&D능력, 녹색산업 육성전략, 선도산업 및 전략산업의 추진 계획, 기후변화협약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중·장기적인 녹색산업 육성방안을 마련
- 또한 현재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저탄소화 및 녹색산업 육성에 대한 검토 및 우선순위를 고려한 세부적 추진전략 마련
 - 기존 검증된 녹색기술 및 산업에 대한 세부적 실행계획 마련 및 체계적 사업추진
 - 융합녹색기술지대, 태양에너지 제조장비클러스터, 그린카 클러스터, 녹색 LED/OLED응용기기 산업기반 구축 등

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

- 기업 및 외자유치 등을 통해 경제규모의 총량 확대를 통한 고용총량의 확대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복합적인 고용전략 추진
- 기업과 구직자간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산학 협력체계 강화 및 지원
-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생산자서비스업의 창업촉진 및 지원
- 사회 서비스 공급확대 및 공익적 목적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육성

2) 정책관리를 위한 방향 설정

1) 지역 산업경제분야 정책관리를 위한 R&D투자 확대 필요

- ‘연구-사업추진-평가-피드백’에 대한 사업관리체계 구축운영
- 새로운 정책추진에 따른 무분별한 계획과 사업수행을 지양하고 부문별 또는 이슈별 조사/연구개발을 통해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관리 필요
- 저탄소화 정책, 신성장동력 및 녹색산업의 발굴, 산업단지의 고도화,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연구 추진

2) 인접지역과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

- 광역·초광역 등의 국가 지역정책에 대응하는 인접 시도간 및 경제주체간 협력체계 구축
 - 인접 시·도간 경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포럼 등의 상설협의체 구성 및 운영
 - 충남에 연고 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타 지역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수행하는 공동 연구개발 지원
 - 전략산업별 공동 국제협력(해외 연관 클러스터와의 교류 활성화 지원,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산업 분야 대학원생 및 해외기술자의 공동 유치 등을 통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사업 지원)
- 전략산업 중심의 초광역협력체계 구축
 - 인접시도(경기, 대전, 충북, 전북)간 광역적 경제협력 지원
 - 접도지역 첨단산업단지 조성, 자동차 및 부품산업 초광역클러스터 구축, 디스플레이산업 초광역메가클러스터 구축
 - 대전·충북과 연계한 초광역바이오 클러스터 구축
 - 전북의 완성차업체와 충남의 부품산업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

3) 조직 구성의 유연화 및 전략적 대응

- 충남 산업정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산업정책 전담부서의 신설 및 도·연구원·TP간의 연구교류를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
- 산업정책분야의 신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프로젝트팀 구성·운영
- 융복합산업 육성 등에 대응하기 위한 ‘문화산업’부문의 산업정책분야로 일원화 추진
- 기업의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

첨부:RASS(Real service, After care, Single gateway, Single window)시스템

□ 경제의 생산적 활력부여 및 기업지원 시스템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·운영

- 지역단위(area-based)의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

- 기업의 니즈(needs)와 글로벌 스탠다드(global standard)에 부합하는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

○ Real service

- 창업, 기술, 홍보·마케팅, 법률·회계, 특허 등 지원분야별 전문가 확보 및 맞춤형 상담기능을 확충하는 등 관련 서비스 공급기반 구축

○ After care

- 투자유치에서 정착까지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애프터 케어(after care) 프로그램 구비

○ Single gateway

- 기업지원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, 그리고 공급자간 상호연계를 위한 지원 상담과 중개기능을 담당할 원스톱 솔루션 플랫폼 구축

○ Single window

- 비즈니스 링크를 구축하여 기업이 하나의 창구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처리시스템 구축

